

보도시점

2024.8.27.(화)  
국무회의 종료(11:00) 이후

배포 2024. 8. 26.(월) 16:00

## 튼튼한 약자복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한 집중 투자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125.7조 원 편성, 전년 대비(보육예산 제외) 7.4% ↑ -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7일(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 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하였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의료개혁 중점 투자 ③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④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⑤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한다.

둘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며,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넷째, 국민의 정신건강과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를 1조 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7일(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 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하였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의료개혁 중점 투자 ③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④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⑤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①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월 183.4만→195.1만 원<4인가구>, +11만 8천 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1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소득 1억→1.3억 원, 재산 9억→12억 원) ▲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등

**②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천 원→1.2만 원)하고, 부양비\* 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③ 자활사업을 확대(7.2만 명, +3천 명)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자활성공 지원금’을 신설(탈수급 6개월 경과시 50만 원, 1년 경과시 추가 100만 원 지급)하여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④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⑤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확대(12.4만→13.3만 명)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 기존시설에 간호사 추가 배치(개소당 2명), 의료장비 보강 등 지원 → 24시간 의료지원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 급여)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210명→17개 지역·410명)한다.

둘째,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 분야별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 예정

❶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 소아청소년과 → 8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❷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❸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❹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0.3억→3억 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❺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❶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14만→20만 명)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 29세 이하(제1주기), 30~39세(제2주기), 40세 이상(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가임력 보존 대상자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총 1회 지원)

❷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20.6만→27.3만 명)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에 따라,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복지부에 신청(2025.7월~)→양부모 상담·가정조사·입양 후 아동 적응상황점검 등 실시

❸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109.8만 개)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4,810→343,510원)하며, 경로당 난방비(+6만 원)와 양곡비(+21만 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넷째,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❶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❷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2센터 신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❸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하여,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금년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8,428억→9,927억 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 원 신규)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 원 신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 원 신규) ▲한국형 ARPA-H(701억 원, +206억 원) ▲글로벌 R&D(1,976억 원, +616억 원) 등

② 공급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 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억→108억 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붙임> 1.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 2025년 달라지는 모습  
3.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5선  
4. 2025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방향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건훈	(044-202-2320)
		담당자	서기관	장태영	(044-202-2321)
담당 부서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장재원	(044-202-3051)
		담당자	사무관	이웅채	(044-202-3066)
담당 부서 <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044-202-3090)
		담당자	사무관	이광성	(044-202-3097)
담당 부서 <자활사업>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2-3070)
		담당자	사무관	전가은	(044-202-3073)
담당 부서 <고독사예방>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12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02-3136)
담당 부서 <응급안심서비스>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044-202-3450)
		담당자	사무관	윤철중	(044-202-3459)
담당 부서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202-3340)
		담당자	사무관	박선주	(044-202-3352)
담당 부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202-3340)
		담당자	사무관	안해원	(044-202-3341)
담당 부서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202-3340)
		담당자	사무관	이대복	(044-202-3350)
담당 부서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2-3320)
		담당자	사무관	이에진	(044-202-3321)
담당 부서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2-3320)
		담당자	사무관	최성필	(044-202-3328)
담당 부서 <장애인개인에산제>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방석배	(044-202-3280)
		담당자	사무관	송영아	(044-202-3287)
담당 부서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방영식	(044-202-2430)
		담당자	사무관	이기욱	(044-202-2435)
담당 부서 <전공의 수련수당>	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조우경	(044-202-2670)
		담당자	사무관	이민정	(044-202-2663)
담당 부서 <응급의료>	응급의료과	책임자	과 장	송영조	(044-202-2550)
		담당자	사무관	최은경	(044-202-2558)
담당 부서 <암 진료>	질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보영	(044-202-2510)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044-202-2515)
담당 부서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배기현	(044-202-2533)
담당 부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윤동빈	(044-202-2532)
담당 부서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02-2680)
		담당자	사무관	임희주	(044-202-2681)
담당 부서 <소아의료>	응급의료과	책임자	과 장	송영조	(044-202-2550)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	(044-202-2563)
담당 부서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귀훈	(044-202-2470)
		담당자	사무관	김수영	(044-202-2474)

담당 부서 <필수의료 R&D>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홍승령	(044-202-2870)
		담당자	사무관	진보라	(044-202-2863)
담당 부서 <모자보건사업>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담당자	사무관	손기정	(044-202-3399)
담당 부서 <위기임신 보호출산>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담당자	사무관	박채린	(044-202-3424)
담당 부서 <아동발달지원계획>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임아람	(044-202-3430)
		담당자	사무관	김기선	(044-202-3439)
담당 부서 <공적 입양체계>	아동정책과	책임자	팀 장	이유리	(044-202-3411)
		담당자	사무관	정윤정	(044-202-3408)
담당 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담당자	사무관	황지영	(044-202-3415)
담당 부서 <노인일자리>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2-3470)
		담당자	사무관	배종우	(044-202-3472)
담당 부서 <기초연금>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조승아	(044-202-3670)
		담당자	사무관	문성혁	(044-202-3681)
담당 부서 <경로당 지원>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2-3470)
		담당자	서기관	박광훈	(044-202-3478)
담당 부서 <주거인프라 연계돌봄>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044-202-3450)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202-3456)
담당 부서 <전국민 마음투자>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연숙	(044-202-3870)
		담당자	사무관	박동희	(044-202-3874)
담당 부서 <자살예방>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은정	(044-202-3890)
		담당자	사무관	조현숙	(044-202-3892)
담당 부서 <정신건강 지원체계>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일열	(044-202-3860)
		담당자	사무관	황지숙	(044-202-3866)
담당 부서 <정신응급 공공병상>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연숙	(044-202-3870)
		담당자	사무관	김혜지	(044-202-3872)
담당 부서 <공공·심야약국>	약무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후희	(044-202-2490)
		담당자	사무관	김소영	(044-202-2486)
담당 부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혜린	(044-202-2690)
		담당자	사무관	김유진	(044-202-2699)
담당 부서 <바이오헬스 R&D>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홍승령	(044-202-2870)
		담당자	사무관	진보라	(044-202-2863)
담당 부서 <제약 산업>	보건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오창현	(044-202-2960)
		담당자	사무관	위운화	(044-202-2970)
담당 부서 <의료기기 산업>	보건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오창현	(044-202-2960)
		담당자	사무관	김권하	(044-202-2969)
담당 부서 <화장품 산업>	보건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오창현	(044-202-2960)
		담당자	서기관	차용민	(044-202-2973)

**I.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 모습**

(단위: 조 원)

구 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정부안 (B)	증감액 (B-A)	%
○ 정부 전체 총지출(a)		656.6	677.4	20.8	3.2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17.0 <보육예산 제외>	125.7	8.6	7.4
■ 보건복지부 비율(%)	b/a	17.8	18.6	-	-

□ 2025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77.4조 원, 전년 대비 3.2% 증가

○ 복지부 총지출은 125.7조 원, 전년 대비 7.4%(보육예산 제외) 증가

\* 정부 총지출 중 복지부 총지출 비율(보육예산 제외)은 0.8%p 상승(17.8→18.6%)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억 원)

구 분	2024년 예산(A) <보육예산 제외*>	2025년 정부안 (B)	전년대비	
			증감 (B-A)	%
<b>총 지 출(A+B)</b>	<b>1,170,445</b>	<b>1,256,565</b>	<b>86,120</b>	<b>7.4</b>
◇ 예 산 (A)	688,459	725,283	36,824	5.3
◇ 기 금 (B)	481,986	531,281	49,295	10.2
◇ 사회복지	995,784	1,072,442	76,658	7.7
■ 기초생활보장	179,197	186,596	7,399	4.1
■ 취약계층지원	51,068	54,782	3,714	7.3
■ 공적연금	443,320	493,485	50,165	11.3
■ 아동·보육	55,579	52,320	△3,259	△5.9
■ 노인	256,483	274,913	18,430	7.2
■ 사회복지일반	10,137	10,346	209	2.1
◇ 보 건	174,660	184,123	9,463	5.4
■ 보건의료	37,590	42,846	5,256	14.0
■ 건강보험	137,070	141,277	4,207	3.1

\* 보육업무의 교육부 이관(2024.6.27.)으로, 2024년 보육예산(5.33조 원) 제외

## Ⅱ. 예산안 주요 내용

### 1

### 약자복지 강화

#### 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6.42%, 4인 가구)으로 인상(수급자 179만 명, +7.1만 명)
  -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11.8만 원(183.4만→195.1만 원, 4인 가구),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 원\*(2,200만→2,341만 원) 인상
    - \*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지난 5년('17~'22) +47만 원의 3배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대상 확대(75세 이상→65세 이상)로 수급대상 증가(+3만 가구)
    - \* 자동차재산 기준: 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 \*\* 부양의무자 기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탈락 →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탈락

■ 생계급여: ('24) 7조 5,411억 원 → ('25 정부안) 8조 4,900억 원(+9,489억 원)



-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성 강화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월 6천 원→1.2만 원)
  - 부양비 부과율을 인하(15% 또는 30%→10%)해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개선
    - \* 폐쇄병동입원 시 입원 정액수가 12% 가산, 격리보호료 행위별 수가 적용

■ 의료급여: ('24) 8조 9,377억 원 → ('25 정부안) 8조 6,882억 원(△2,495억 원\*)

\* 의료급여기금 누적 적립금 우선 활용에 따른 절감분

□ (자활사업) 참여자를 3천 명 확대(6.9만→7.2만 명)하고, 자활근로 단가 3.7% 인상(시장진입형 61,930→64,220원)

○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도입(취·창업 등으로 탈수급 6개월 경과: 50만 원, 1년 경과: 추가 100만 원), 자활사례관리사 전국 배치 확대(125→250명)

- 자활사업: ('24) 7,499억 원 → ('25 정부안) **8,206억 원**(+707억 원)
- 자활사례관리: ('24) 26억 원 → ('25 정부안) **40억 원**(+14억 원)



## ②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고독사예방) 위험군 발굴·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약 5천 명) 맞춤형 지원

○ 고독사 예방 전담 사례관리사를 지자체에 신규 배치(114명, '25.7월)→ 위험군 대상 서비스 연계 및 회복 지원

- 고독사예방: ('24) 29억 원 → ('25 정부안) **66억 원**(+37억 원)
- 고독사예방사례관리: ('25 정부안) **10억 원**(신규)



□ (응급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가정내 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27만→30만 대)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4) 293억 원 → ('25 정부안) **311억 원**(+18억 원)

### ③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16→20개소),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주간 1.1만→1.2만 명, 방과후 1.0만→1.1만 명)
  - 최중증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규 설치,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 단가 2.9% 인상(24,220→24,930원)

■ 발달장애인: ('24) 3,578억 원 → ('25 정부안) **4,030억 원**(+452억 원)

- (활동지원) 대상(12.4만→13.3만명) 및 가산급여 지원시간(195→205시간) 확대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8개·210명→17개 지역·410명), 활동지원 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모델 시범적용

■ 장애인활동지원: ('24) 2조 2,846억 원 → ('25 정부안) **2조 5,323억 원**(+2,477억 원)

■ 장애인 개인예산제: ('24) 10억 원 → ('25 정부안) **15억 원**(+5억 원)



- (장애아동) 장애미등록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연령 상향(6세 미만→9세 미만, +1.8만 명),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 인상(12,140→14,140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24) 1,940억 원 → ('25 정부안) **2,327억원**(+387억 원)

-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334,810→343,510원, 2.6%),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

■ 장애인연금: ('24) 8,932억 원 → ('25 정부안) **8,847억원**(△85억 원)

■ 장애인일자리: ('24) 2,227억 원 → ('25 정부안) **2,345억원**(+118억 원)

- (거주시설) 최중증장애인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 장애인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25 정부안) **6억 원**(신규)

## 2

## 의료개혁 중점 투자

※ 분야별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 예정

- (전공의·의대<sup>0.4조원</sup>)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8개과\*) 지원

\* ('24) 소아청소년과 → ('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 수련비용: 신규전공의 수련비용(9천명 대상, 교육비 등 직접비용, 0.3조 원)
- 수당: 전공의(220→4,600명, 월 100만 원), 소아·분만 전임의(140→300명, 월 100만 원)

- (필수의료<sup>0.3조원</sup>)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확충,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 등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

- 소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12→14개소), 달빛어린이병원(45→93개소)
- 응급: 응급헬기(9→10대, 출동수당 30만 원), 특수목적 음압구급차(14→56대)
- 암: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5개소, 25억 원), 양성자치료기 도입(179억 원)

- (지역의료<sup>0.6조원</sup>)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0.3조 원), 중앙-권역-지역간 협진(0.1조 원), 신규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소):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0.1조 원)
- 지역거점병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 한시 지원(41개소, 0.2조 원)
- 협진진료: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운영비(0.1조 원), 중환자실 원격 협진(2개 권역)

- (안전망·R&D<sup>0.2조원</sup>)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0.3억→3억 원), 신규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지역거점병원(국립대병원)·의사과학자 R&D

### 1 건강한 임신·출산과 안정적인 아동 성장환경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임신前)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14만→20만 명, 25~49세 남녀), 영구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 필요한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 신규 지원(640명)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추가 설치(10→12개소)

■ 모자보건: ('24) 245억 원 → ('25 정부안) **276억 원**(+31억 원)

- (출산)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위탁보호비 신규 지원(300명, 100만 원)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24) 42억 원 → ('25 정부안) **46억 원**(+4억 원)

- (아동자산)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위해 디딤씨앗통장을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20.6만→27.3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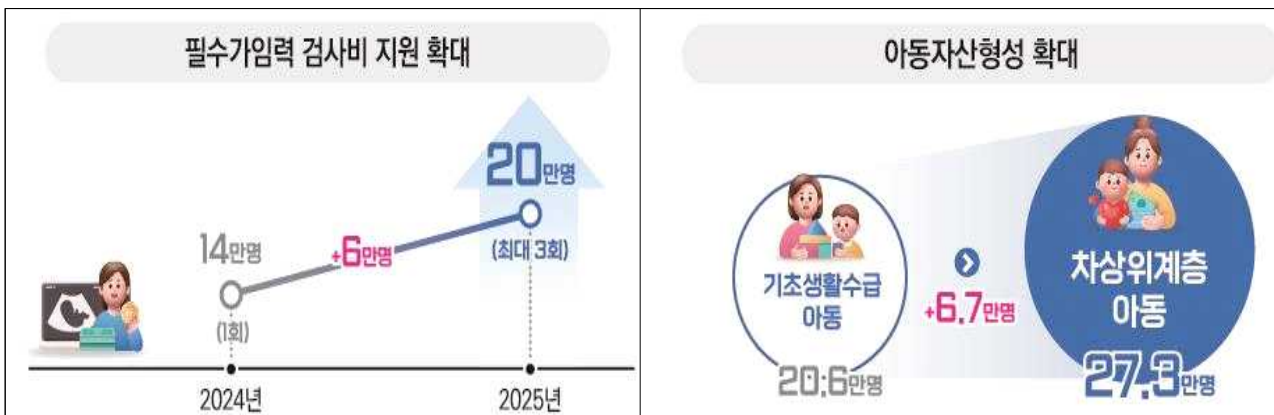
■ 아동발달지원계좌: ('24) 1,267억 원 → ('25 정부안) **1,532억 원**(+265억 원)

- (입양) 예비 양부모 상담·조사, 입양기록물 공적·일원화 관리 등  
국가가 책임지고 입양절차를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25.7월) 지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정) '25.7월 시행

■ 공적입양체계 구축: ('24) 32억 원 → ('25 정부안) **36억 원**(+4억 원)

■ 입양기록물 공적관리: ('24) 6.2억 원 → ('25 정부안) **23.4억 원**(+17.2억 원)



## 2 초고령사회에 대응, 어르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소득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103만→109.8만 개) 일자리 공급

■ 노인 일자리: ('24) 2조 264억 원 → ('25 정부안) 2조 1,847억 원(+1,583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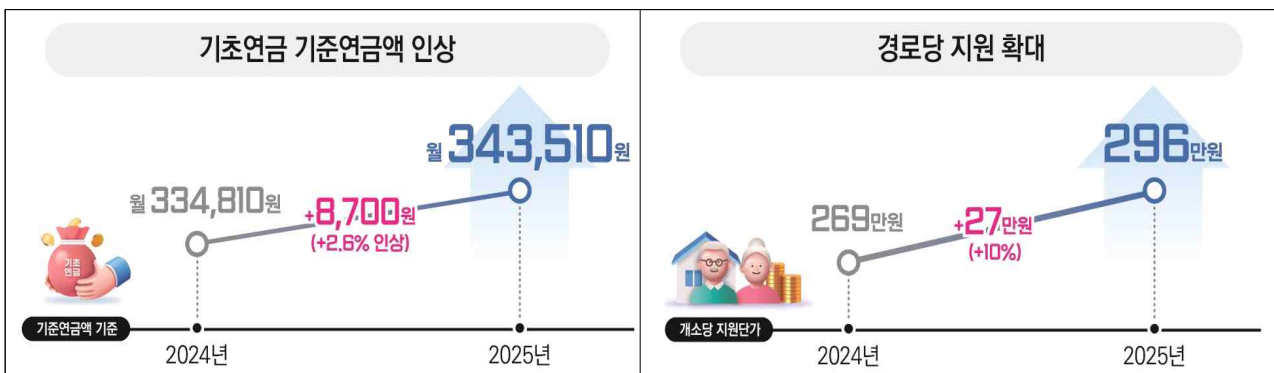


-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736만 명 대상 지급, 연금액 2.6% 인상 (월 334,810→343,510원)

■ 기초연금: ('24) 20조 2,015억 원 → ('25 정부안) 21조 8,646억 원(+1조 6,631억 원)

-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296만 원/난방비 3→5개월 <+6만 원>, 양곡비 8→12포대<+21만 원>)

■ 경로당 지원: ('24) 800억 원 → ('25 정부안) 875억 원(+75억 원)



- (주거인프라 연계돌봄) 국토부와 협업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주거 인프라와 연계한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4개소, 신규 시범사업)

■ 주거인프라 연계돌봄: ('25 정부안) 3억 원(신규)

### ①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16만 명)
- (자살예방)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885명),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확대(9→12개 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 설치
- (정신건강지원체계)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주거와 자립 사례관리 동시 제공(48명,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500→800명),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확대(60→63개소),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130병상)

- 전국민마음투자(바우처): ('24) 286억 원 → ('25 정부안) **457억 원**(+171억 원)
- 자살예방사업: ('24) 508억 원 → ('25 정부안) **562억 원**(+54억 원)
- 정신건강지원체계: ('24) 200억 원 → ('25 정부안) **223억 원**(+23억 원)
- 정신건강증진사업: ('24) 1,271억 원 → ('25 정부안) **1,318억 원**(+47억 원)



### ②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심야약국) 공공심야·야간 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64→220개소)해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접근성 제고 노력
- (요양병원 간병지원)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해 2년차 시범사업 수행

- 공공심야약국 지원: ('24) 30억 원 → ('25 정부안) **50억 원**(+20억 원)
- 요양병원 간병지원: ('24) 85억 원 → ('25 정부안) **61억 원**(△24억 원)

## ① 바이오 헬스 R&D 투자를 1조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 (R&D 총규모)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R&D 투자 대폭확대(8,428억→9,927억 원, 17.8% 증가)
- (핵심 R&D사업) 도전·혁신적, 글로벌 R&D 확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추진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4) 495억 원 → ('25 정부안) 701억 원(+206억 원)
  -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24) 604억 원 → ('25 정부안) 1,055억 원(+451억 원)
  - 다부처 협업 프로젝트: ('24) 189억 원 → ('25 정부안) 611억 원(+422억 원)



## ② 보건산업 지원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습니다.

- (제약)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을 지원(1개소, 신규)하고, 임상 시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주도 임상시험허브플랫폼 운영
- (의료기기) 국산 혁신의료기기 바우처 지원사업(2개소)을 시작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화장품)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규제 대응 지원을 강화해 K-뷰티 확산 촉진
  - 제약산업 육성지원: ('24) 327억 원 → ('25 정부안) 367억 원(+40억 원)
  - 국산 혁신의료기기 바우처 지원사업: ('25 정부안) 4억 원(신규)
  -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24) 147억 원 → ('25 정부안) 156억 원(+9억 원)

과제		2024년	2025년	주요 내용
저 소 득 층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 4인가구 급여액 최대 11.8만원 인상(183.4만→195.1만 원, +6.42%)
		6.09% 인상	6.42% 인상	
		【노인근로소득 공제】		■ 65세 이상 노인에게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 +30%)
		75세 이상	65세 이상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준 확대
		1600cc. 200만 원 미만	2000cc. 500만 원 미만	
		【부양의무자 기준(수급탈락)】		■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연소득, 일반 재산) 완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시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		■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위해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체계 개편(정액→정률)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6천→1.2만 원)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개선 * 폐쇄병동 입원 12% 가산, 격리보호료 행위별 수가 적용 ■ 부양비 부과율 완화(가구유형에 따라 15% 또는 30% → 10%)
		① 1종 ▲ 의원: 1,000원 ▲ 병원종합1,500원 ▲ 상급종합2,000원 ② 2종 ▲ 의원:1,000원 ③약국 500원	① 1종 ▲ 의원: 4% ▲ 병원.종합: 6% ▲ 상급종합: 8% ② 2종 ▲ 의원: 4% ③약국 2% ※진료비 2.5만 원 이하 구간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 상한설정(5천 원)	
자활사업	6.9만 명	7.2만 명	■ 자활근로 인원 확대(6.9만→7.2만 명) * 근로유지형 8,400명(+150명) 사회서비스형 44,800명(+1,050명) 시장진입형 18,800명(+1,800명) ■ 자활급여 단가 3.7% 인상 * 근로유지형 : 32,980원/일 사회서비스형 : 56,210원/일 시장진입형 : 64,220원/일 ■ 자활 사례관리사 전국 확대 (250개 지역자활센터)	
	125명	250명		

	과제	2024년	2025년	주요 내용
	자활성공 지원금	-	최대 150만 원	■ 자활성공지원금(탈수급 6개월 경과: 50만원, 1년 경과: 100만 원 추가 지원)
	디딤씨앗통장	기초수급 가구 아동 20.6만 명	기초수급· 차상위가구 아동(서울시 포함) 27.3만 명	■ (소득) 기초수급가구 → 차상위 가구 확대 ■ (지역확대) 서울시 아동 지원
장 애 인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4,810원	월 최대 433,510원	■ 기초급여 2.6% 인상
	장애인일자리	3.2만 명	3.4만 명	■ (대상확대) +2천 명
	장애인 활동지원	12.4만 명	13.3만 명	■ (대상확대) +9천 명 ■ (단가인상) +470원/시간 ■ 중증장애 활동지원 가산급여 확대 가산급여 시간 월 195→205시간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2.1만 명	2.3만 명	■ (대상확대) +2천 명 ■ (단가인상) 바우처 2.9% 인상(16,620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8.6만 명	10.4만 명	■ (대상확대) +1.8만 명
노 인	노인일자리	일자리수 103만 개	일자리수 109.8만 개	■ (공익활동형) +3.8만 개 (65.4만 → 69.2만 개) ■ (사회서비스형) +2만 개 (15.1만 → 17.1만 개) ■ (민간형) +1만 개 (22.5만 → 23.5만 개)
	경로당 지원	개소당 269만 원	개소당 296만 원	■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개소당 지원 단가 10% 인상
	노인주거연계 돌봄	-	4개소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신규 도입 * 수행기관 입주민의 복지수요 전반을 관리, 식사·여가·돌봄서비스 제공
	기초연금	월 334,810원	월 343,510원	■ 기준연금액 2.6% 인상

	과제	2024년	2025년	주요 내용
저출생 대응	영구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	640명	■ 영구적 불임 예상되는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여성 600명, 남성 40명)
	가임력 검사	16개 시·도 부부 1회	전국 가임기 남녀 최대 3회	■ 혼안지역 등 무관하게 모든 25~49세 남녀로 대상확대 및 주기별 1회(최대 3회)로 지원 횟수 확대
	위기임신 보호출산	-	300명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월 100만원, 3개월)
	공적입양체계 구축	-	600가정	■ 공적입양체계 개편을 위한 예비양부모 조사 및 사후관리 수행
정신건강	전국민 마음투자	8만 명	16만 명	■ 전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9개 시·도	12개 시·도	■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 환경·경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9개→12개 시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	48명	■ 정신질환자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약물복용, 스트레스 등 건강 및 재정 관리, 대인·가족관계 관리 등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운영	12개소	14개소	■ 정신응급환자 24시간 대응을 위한 권역센터 확충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500명	800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
	정신응급 공공병상	110병상	130병상	■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병상 확보 및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 확충
	자살예방 상담전화	100명	150명	■ 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 설치
보건산업	R&D 총규모	0.8조 원	1조 원	■ 바이오헬스 R&D 투자 대폭확대(8,428억→9,927억 원, 17.8% 증가)
	제약산업 육성지원	-	1개소	■ 수급불안정 의약품 제조기업 지원(1개사, 9억 원) 등
	혁신의료기기 바우처 지원사업	-	2개소	■ 국산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사용 바우처 지원

## [ 목 차 ]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월 11.8만 원(6.42%↑, 4인 가구) 인상됩니다. ....	21
2.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를 인상하고, 부양비 기준을 완화합니다. ....	22
3. 자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활성공지원금을 도입합니다. ....	23
4. 청년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합니다. ....	24
5. 장애인에 대한 돌봄지원을 확대합니다. ....	25
6. 장애아동의 재활과 돌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26
7. 임신·출산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27
8. 아동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	28
9.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합니다. ....	29
10.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로 확대합니다. ....	30
11.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2배 이상 강화합니다 ....	31
12.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	32
13. 국민의 마음돌봄과 정신응급 지원을 강화합니다. ....	33
14.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34
15. 바이오헬스 R&D 1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	35

※ 의료개혁 사업의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 예정

##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월 11.8만 원(6.42% ↑, 4인 가구)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장재원 과장, 044-202-3051)

생계급여 지원 확대 (4인가구 기준, 월 11.8만 원 인상<기준중위소득 6.42% ↑>)

### □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 '25년 생계급여 월 최대 11.8만 원(4인 가구) 인상\*
  - \* (1인 가구) '24. 月 713,102원 → '25. 月 765,444원(+月 52,342원)
  - (4인 가구) '24. 月 1,833,572원 → '25. 月 1,951,287원(+月 117,715원)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2000cc, 500만원 미만 100%→ 4.17%)
  -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4.17%)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완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 기준 완화
  - \* (현행)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개선)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근로소득공제 확대)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30% 추가공제) 대상 확대(75세 이상→ 65세 이상)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원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2.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를 인상하고, 부양비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초의료보장과, 변성미 과장, 044-202-3090)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월 6천 원 → 1.2만 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완화 (15% or 30% → 일괄 10%)**

### □ 주요 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월 6천 원→ 1.2만 원)

\*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 (부양비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 비율 완화 (15% or 30% → 일괄 10%)→ 과도한 수급 제한(탈락) 방지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부양비를 포함한 수급자 소득 산정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탈락하는 경우 발생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40% ('25년 4인 기준 2,439,109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3. 자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활성공지원금을 도입합니다.

(자활정책과, 김영아 과장, 044-202-3070)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69,000개→72,000개, +3,000개)

자활급여 단가 인상 (3.7%, 월 +3~6만원),

취업성공시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년간 최대 150만 원)

자활사례관리사 2배 확충 (125명→250명, +125명)

#### □ 주요 내용

- (자활 일자리 및 급여) 자활근로 일자리\* 3,000개 추가(69,000→72,000개), 자활급여 단가 3.7% 인상\*\*
  - \* (예) 식음료·청소·세탁업, 간병·가사지원서비스, 시설물관리·환경정비 등
  - \*\* 근로유지형 8,250개 → 8,400개 / 월 최대 82.7만 원 → 85.7만 원  
사회서비스형 43,750개 → 44,800개 / 월 최대 140.9만 원 → 146.1만 원  
시장진입형 17,000개 → 18,800개 / 월 최대 161만 원 → 167만 원
- (자활성공지원금) 자활참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취업하는 등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지급(25.下)
  - \*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 후 6개월 지속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지속시 100만 원 지급
- (사례관리사) 참여자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자활사례관리사 125명 확충, 전체 지역자활센터로 확대 배치(125명→250명, 센터당 1명)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무참여) 및 조건부 수급자 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희망참여)
- (지원내용) 참여자는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근로하며 급여 수령, 직업훈련과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탈수급 준비
- (근무여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월 소득 최대 161만 원(24년 기준)

## 4. 청년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복지과, 노정훈 과장, 044-202-3120)

###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5,000명 규모) 지원사업 신규 추진

####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고립은둔청년 중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①마음톡(안부문자), 사회적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②다시잇기 프로젝트(자조 모임, 멘토링 등), ③사업 홍보(SNS 및 다양한 채널 활용) 수행

※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 논의를 통해 필요시 수정·보완 예정

- (수행지자체)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80개 내외 시군구
  - 청년 고독사 예방사업을 이미 수행 중이거나 관심 있는 기관·단체(1인 가구센터, 사회복지관, 종교협의체 등)에 위탁 또는 연계하여 전문성 제고
- \* 예산안 국회심의·확정 후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 지자체 수 또는 규모 변동 가능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만 19~39세의 고독사 고위험 청년
- (지원내용)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마음톡(안부문자) ▲다시잇기 프로젝트(사회적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프로그램) ▲사업 홍보 등
- (사업기간) '25년 2월부터 시행(지자체 사업 준비기간 고려)

## 5. 장애인에 대한 돌봄지원을 확대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모두순 과장, 044-202-3340)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123,715명 → 132,715명, +9,0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2개소)**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2.1만 명→2.3만 명, +2천 명)**

### □ 주요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부담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천 명 추가 확대\*

\*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수: '24. 123,715명 → '25. 132,715명(+9,000명)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서비스단가 2.9% 인상\*

\* 서비스단가: '24. 16,150원 → '25. 16,620원(+470원, 2.9% ↑)

- (최중증 긴급돌봄)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 지원을 위한 최중증 전담 긴급돌봄센터 시범운영(2개소, 신규)

\* (지원내용) ▲ 긴급돌봄센터 이동 및 행동 중재, ▲ 24시간 돌봄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에 참여 가능한 바우처 제공\* 확대(1.2만 명, +1천 명)

\* <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등록 발달장애인(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제공(이용)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방과후활동서비스) 1.1만 명 대상 서비스 제공(+1천명)

- 다양한 프로그램(직업탐구·자립준비·여가활동 등)에 이용자 욕구·선택 반영·참여하도록 바우처 제공(제공(이용)시간: 월 66시간)

## 6. 장애아동의 재활과 돌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장애인건강과·장애인서비스과, 임현규·모두순 과장, 044-202-3190,3350)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86,000명→ 104,000명, +1.8만 명)**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 (12,140원→ 14,140원, +2천 원)**

### □ 주요 내용

- (발달재활) 장애미등록아동 지원연령 확대(6세미만→9세미만), 현장 대기수요 등을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인원 확대(8.6만→10.4만 명)
- (장애아돌봄)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돌봄서비스 지원단가 인상(12,140→14,140원)

### □ 사업 개요

- ❶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재활, 감각발달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 단, 6세 미만(9세 미만으로 확대 예정, '25.1.3.~) 장애미등록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장애아동 1인당 월 17만원 ~ 25만원의 바우처\* 제공
  - \* 소득기준별(기초생활수급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원액 상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❷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중증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
  - (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 1명당 연 1,080시간\* 돌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1,080시간 이내 전액 무료, 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1,080시간 이내 본인 부담(40%),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7. 임신·출산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 044-202-3390)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16개 시도·부부 1회→전국·가임기 남녀·최대 3회)**  
**영구적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신설 (여성 200만 원, 남성 30만 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확대 (10→12개소, +2개소)**

### □ 주요 내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역·혼인·자녀 수 무관 모든 25~49세 남녀로 사업대상 확대 및 주기별 1회(최대 3회)\*로 지원 횟수 확대
  - \* 29세 이하(제1주기), 30~39세(제2주기), 40세 이상(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 \* 가임력 보존 대상자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총 1회 지원)
-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센터) 난임, 유·사산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등 심리·정서적 지원
  - \* (설치·운영) '24년 중앙 1, 권역 9개소 → '25년 중앙 1, 권역 11개소

### 사업 개요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모든 25~49세 남녀(지역·혼인·자녀 수 무관)
- (지원내용)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 검사비 실비 지원
  - ※ 필수 검사항목: 여·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남·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② 영구적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 (지원대상) 가임력 영구 손실의 경우(난소절제술, 고환절제술 등)
- (지원내용) 가임력보존 대상자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총 1회 지원)

#### ③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센터

- (지원대상) 난임부부, 임산부, 유·사산, 산모, 양육모 및 배우자
- (지원내용) 난임, 유·사산 및 임산부 대상 상담업무, 자조모임 등

## 8. 아동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 이유리 팀장, 044-202-3411)

**정부 책임 하, 양부모 조사 등 입양절차 수행 비용 지원**  
**입양인 지원을 위한 입양기록물 이관·통합 관리 기반 마련**

### □ 주요 내용

- 입양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한 예산 반영
  - 아동을 입양할 부모를 복지부가 책임지고 상담·조사하고 입양 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신설 (4억 원)
  - 입양인의 정보 찾기, 친가족 찾기 등 권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기록물의 아동권리보장원 이관·통합 관리 추진 (23.4억 원)
- ※ 국가 책임 입양 수행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일부 사업을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예산으로 이관 (입양인식개선사업,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 □ 사업 개요

#### ① 예비양부모 조사 및 사후관리(신설)

-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에 따라,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복지부에 신청하여 입양을 진행(25.7월~)
- 양부모 상담, 가정조사, 입양 후 아동 적응상황 등을 복지부가 총괄 (입양 현장 전문기관 등 위탁)

#### ② 입양기록물 현황조사 및 보존 지원(강화)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입양 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관하며 입양인에 입양정보·가족 찾기 서비스 제공(25.7월~)

#### ③ 입양 관련 계속사업

- 국내·외 입양인을 위한 심리치료, 자조모임 등 서비스 지원, 입양인식개선 홍보·교육 등 전년 동일 수준 반영
-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입양 숙려기간 지원 단가 인상 등 입양가족 지원 확대 병행(복권기금)

## 9.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동보호자립과, 임아람 과장, 044-202-3430)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6.7만 명)**

### □ 주요 내용

- (가입 소득기준 완화) 취약계층 아동 성장 후 학업·주거·취업 등을 위한 초기 자산형성 지원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확대

※ 지원 인원(예산기준) 20.6만 → 27.3만 명

### 사업 개요

- (아동발달지원계좌) 만 0 ~ 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이 후원 등을 통해 적립  
→ 정부가 월 10만원 내 아동1 : 정부2로 매칭 적립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 예외(조기인출) : 만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 \*\* 만 18세 이후로도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 10.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로 확대합니다.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 044-202-3470)

**노인일자리 수 110만개로 확대** (103만 → 109.8만 개, +6.8만 개)

### □ 주요 내용

- (일자리 수) 노인일자리 수 6.8만 개 확대

(단위 : 만개)

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24년	65.4	15.1	22.5
'25년	69.2	17.1	23.5
증감	+3.8	+2	+1

- '25년 노인인구 1,051만 명 대비 10.4% 일자리 제공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 (지원내용)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

유 형	내 용	대 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계	-	-	1,098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노년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92	30 (3시간, 10일)	월 29만 원 (11개월)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65세 이상 (일부 60세)	156	60 (3시간, 20일)	월 76.1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60세 이상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아이돌봄 시범사업	경력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일자리	60세 이상	5	60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	64	참여노인 1인당 연 267 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99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 (또는 5만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70	기업에 최대 240만원 (월40만원×6개월)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 고용기업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 11.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2배 이상 강화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성창현 과장, 044-202-2420)

(의료개혁총괄과장, 강준 과장, 044-202-1860)

###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투자 등 재정투자 2배 이상 확대

※ 분야별 상세 예산 내역은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함께 발표 예정

- (전공의·의대<sup>0.4조원</sup>)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8개과\*) 지원

\* ('24) 소아청소년과 → ('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 수련비용: 신규전공의 수련비용(9천명 대상, 교육비 등 직접비용, 0.3조 원)
- 수당: 전공의(220→4,600명, 월 100만원), 소아·분만 전임의(140→300명, 월 100만 원)

- (필수의료<sup>0.3조원</sup>)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확충,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 등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

- 소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12→14개소), 달빛어린이병원(45→93개소)
- 응급: 응급헬기(9→10대, 출동수당 30만 원), 특수목적 음압구급차(14→56대)
- 암: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5개소, 25억 원), 양성자치료기 도입(179억 원)

- (지역의료<sup>0.6조원</sup>)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0.3조 원), 중앙-권역-지역간 협진(0.1조 원), 신규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소):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0.1조원)
- 지역거점병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 한시 지원(41개소, 0.2조 원)
- 협진진료: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운영비(0.1조 원), 중환자실 원격 협진(2개 권역)

- (안전망·R&D<sup>0.2조원</sup>)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0.3억→3억 원), 신규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지역거점병원(국립대병원)·의사과학자 R&D

## 12.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응급의료과, 송영조 과장, 044-202-2550)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수 확대 (12→1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재정지원 기관 확대 (45→93개소)

### □ 주요 내용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환자의 특성에 맞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수 확대(12→14개소)
- (달빛어린이병원) 야간·휴일에 가까운 곳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기관 확대(45→93개소)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내용)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별 분포, 소아응급환자 수, 소아응급환자 진료역량 등을 고려해 '25년 추가 2개소를 지정·운영 지원(12→14개소)
  - (달빛어린이병원) 경증환아의 응급실 쏠림을 막고, 응급실 이용의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대상 확대(45→93개소)
- (신청방법) '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공모(1분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의료기관→해당 시·군·구, 상시)

### 13. 국민의 마음돌봄과 정신응급 대응을 강화합니다.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044-202-3870)

(정신건강정책과, 김일열 과장, 044-202-386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대상자 확대 (8만→16만 명, +8만 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 확대 (12→14개소, +2개소)**

**정신응급 공공병상 (110→130병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60→63개소, +3개소)**

#### □ 주요 내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8만→16만 명)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12→14개소),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상시 대응 강화
- (정신응급 공공병상) 정신질환자 응급이송을 위한 지자체 공공병상을 전국 총 20병상(110→130병상) 추가하여 위기상황 적시 치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문제인 마약, 도박 등 중독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대(60→63개소) 설치

#### 사업 개요

##### < 전국민마음투자 사업 >

-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1:1 대면)를 8회(회당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증빙서류\*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10월부터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소견서 등

## 14.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살예방정책과, 전은정 과장, 044-202-3890)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 확대**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 신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 지역 확대** (9→12개 시·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청년 확대** (소득기준 폐지)

### □ 주요 내용

- (상담 접근성 개선) 자살예방 통합 상담전화(109) 2센터 개설\*로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 개선

\* 자살예방상담전화 통합·개편('24.1.1)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상담수요(인입량) 49.4% 증가, 상담인력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담센터 추가 개설  
(기존 1센터 상담인력 100명+2센터 50명)

- (자살유족 지원) 자살 사건 발생 직후 유족에 신속·다각적으로 개입\*하여 일상회복을 돕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3개 시·도 확대 실시\*\*(대전, 울산, 경남)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필수

\*\* 기존 9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제주) → 3개 시·도 추가(대전, 울산, 경남)

- (청년 자살시도자 지원) 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내원한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치료비 지원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필수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전국민
- (지원내용)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 개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역 및 자살시도자 지원 대상 청년 확대

## 15. 바이오헬스 R&D 1조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홍승령 과장, 044-202-2870)

**바이오헬스 R&D 1조원 규모 확대** (24년 대비 17.8% 증가한 9,927억 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조성**

### □ 주요 내용

- (다부처 협업 패키지)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위한 다부처 협업 사업추진

\*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 ('25. 정부안, 신규) 46억 원  
유전자, RNA 및 후성유전체편집기반 유전자치료제개발: ('25. 정부안, 신규) 23억 원  
보건의료데이터상호운용성지원기술개발 : ('25. 정부안, 신규) 57억 원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 ('25. 정부안, 신규) 68억 원

-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지역 주요 국립대병원 內 연구 인프라 및 특화연구 지원하여 진료-연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체계 마련

\*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 ('25. 정부안, 신규) 110억 원

- (도전·혁신형) 국가 난제 해결 및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해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강화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 '24. 495억 원 → '25 정부안. 701억 원

- (글로벌 R&D) 특화연구소 등 글로벌 Top-tier와 협력 플랫폼 구축하여 최고 수준 연구생태계 조기 이식 및 획기적 성과 창출

\* 글로벌 R&D : '24. 1,360억 원 → '25 정부안. 1,976억 원

### 사업 개요

- (다부처 협업 패키지) 부처 간 분절된 R&D 투자 구조 극복하고 기술 개발-임상-인·허가-시장진입까지 전주기 지원 위한 다부처 협업패키지\* 추진

\* ①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주기 개발, ②유전자치료제 딥테크 연구개발, ③사용자 중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④첨단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⑤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및 신속개발체계 구축 지원

#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 약자복지 강화

**더 넓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자립기반 확대로  
보다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 ▶ 생계급여 역대 최고 수준  
6.42% 인상(4인가구),  
자립 성공시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 ▶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약5천명)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아동의 건강한 미래와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을  
보장합니다.**

- ▶ 영구 불임 예상 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지원(640명),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14→20만명)
- ▶ 취약아동 디딤씨앗통장  
소득기준 완화(+6.7만명),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공급  
(110만개)

## 의료개혁 투자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온국민 정신건강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둡니다.**

- ▶ 전국민 마음투자 서비스 대상 확대(8→16만명),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강화(9→12개 시도)
- ▶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500→800명),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64→220개소)

## 바이오헬스 육성

**바이오헬스 R&D 1조원 투자와  
보건산업 지원으로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 ▶ 바이오헬스 R&D 예산 1조원 진입
- ▶ 국산 혁신의료기기, 화장품산업(K-뷰티)  
투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보건복지부